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추진배경 및 현황



신 종 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통신시장의 경쟁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통신 규제정책이다.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2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1차 정책은 '07년 3월 15일에 2차 정책은 '07년 7월 23일에 발표되었다. 본 글에서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추진배경·내용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대한 이해증진과 향후 통신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추진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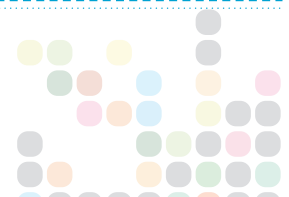
'07년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이 추진되던 시점의 통신시장은 종래와 달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06년 통신시장의 규모는 32조원 내외로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어 시장에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이익증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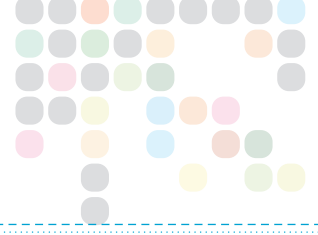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 시 통신시장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유선시장				무선시장		
		시내	인터넷	기타	소계	이동통신	TRS	소계
시장규모 (억원)	05년	52,361	36,928	37,256	126,545	179,472	913	180,385
	06년	51,685	39,681	39,242	130,608	188,271	989	189,260
시장점유율 (06년 잠정)	1위	KT(92.7)	KT(53.8)	-	-	SKT(56.6)	KT(95.8)	-
	2위	하나로(6.7)	하나로(27.8)	-	-	KTF(27.7)	-	-
	3위	데이콤(0.5)	파워콤(9.3)	-	-	LGT(15.7)	-	-

※ 자료 : 정보통신산업연보, 기간통신사업자 기준(별정·부가 제외)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①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②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③정책방향과 일정의 사전제시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제1차 정책방안발표('07. 3. 15)

기존 통신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서비스가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곤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결합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①통신역무체계 개선 ②결합판매 규제완화 ③인터넷 전화 활성화 ④보조금 규제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⑤초고속 인터넷 요금신고제 전환여부 확정 ⑥별정통신사업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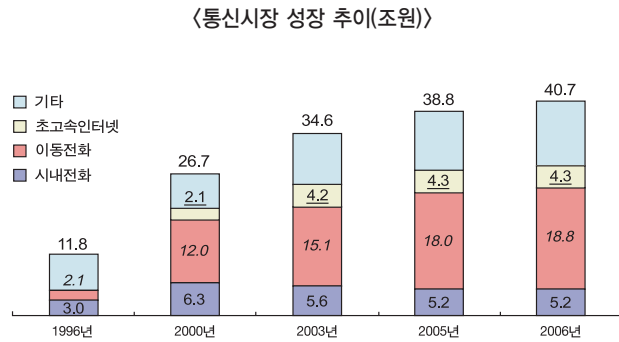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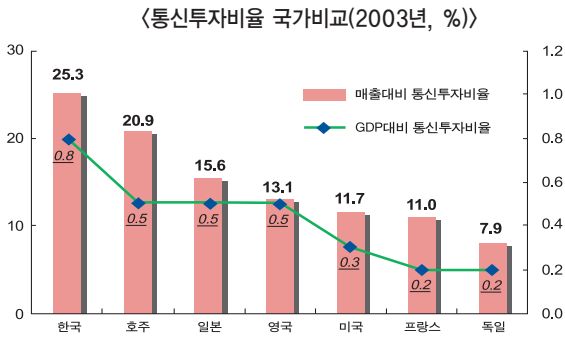
①통신역무체계 개선은 종래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일역무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추가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래 전화·초고속 인터넷 등 세분화된 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송·주파수 할당·회선설비 임대역무 3가지로 우선 통합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송역무로 단일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결합판매 규제완화는 종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할인상품 출시를 제한하던 것을 시장 자율적 요금인하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유도를 위해 허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할인율이 일정기준 이하(10%)일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 시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인터넷 전화 활성화는 기존 부여된 070번호의 부정적 인식(스팸 번호오인)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④별정통신사업 제도개선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접속·보편적 역무·설비제공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Ovum(2006), 정보통신산업협회(기타: 시외·국제·전용회선·인터넷포탈 등), 별정·부가포함

III.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제2차 정책방안발표('07. 7. 23)

제1차 통신규제 로드맵 정책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에서는 사업자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①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②도매규제 도입과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며 ③WCDMA의 USIM Lock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통신규제 로드맵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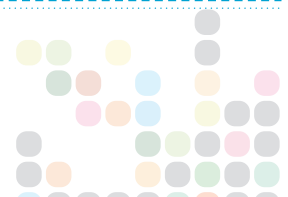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주파수·설비제약 등으로 시장진입에 제한이 있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로부터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 법(안)은 재판매 의무사업자의 지정과 도매제공 대가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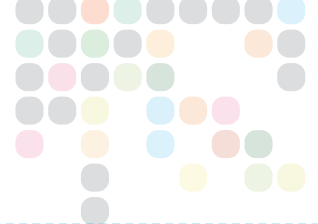
②도매 제공의 도입과 요금 인가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재판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 도입 후 3년이 경과되면 요금 인가제도는 폐지되며 한편, 도매제공 대가가 고시될 경우 요금인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요금 인가제도 폐지)된다. ③WCDMA의 USIM Lock 해제는 소비자들이 USIM Card만 교환하면 단말기의 교체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추진 되었다.

IV.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부분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과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기통신사업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세부과제	추진실적	향후계획
진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무통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07. 9. 14) - 전송, 주파수할당, 회선설비임대 역무 등 3개로 통합 ('07. 12. 15 시행) 역무단일화와 허가기준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0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 허가고시개정 등 후속 작업 추진
결합판매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 요금할인 허용('07.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합할인상품 요금인가심사 면제기준조정(상향) 추진 재판매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요금심사폐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계획마련('07. 7. 25) 및 시범서비스 실시 ('07.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이동 관련 고시 개정과 번호이동 본서비스 실시('08.6월)
보조금규제 일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규제제도 폐지('08. 3월) 	-
도매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0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 재판매 대가고시 제정을 통해 재판매의 조기추진
USIM Lock 해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사업자 내 WCDMA USIM Lock 해제('0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WCDMA USIM Lock 전면해제('08. 7월)
별정통신 사업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정사업자의 상호접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0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분리, 보편적 역무, 이용약관신고의무 부과 등 기간별정차 이 해소추진 계획

법의 개정에 따라 남은 과제의 추진진행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과 업계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겠다. 시장과 기술은 All-IP 화와 융합(Convergence)라는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도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도 더욱 시장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시장·업계·국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달성하여 시장의 활력증진과 소비자 이익 제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TOA

